

December 06, 2019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12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19. 11. 28. ~ 12. 4.)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국회에서 예정된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을 첨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융위] 지역 중소 벤처기업 지식재산 금융 지원 관련

2019. 11. 28. 특허청과 ‘지역 중소 벤처기업 지식재산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주된 내용은 ① 혁신기업에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0억원 수준의 모험자본 공급, ②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부실시 은행권이 이를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청 주도의 회수지원기구 설치 추진, ③ 기계, 재고자산 등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금융위 주도로 설치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2회 지식재산포럼 개최](#)



[공정위] 대리점거래 관련 개선 방안 발표

2019. 11. 27. 대리점거래 분야 중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에서의 ‘업종별 맞춤형 대책’ 등을 발표함. 주된 내용으로 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정, ② 대리점 지원역량이 풍부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권장, ③ 2020년 하반기 중 신규 6개 업종을 선정해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계약서 보급 추진 예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기부1]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개선 발표

2019. 11. 2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전면 개선 발표.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 구분하여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종합평가 가중치 차별화, ② 비용효과분석 등 경제성 분석방법 다양화, ③ 소재 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 부여 등이 있음

[\[참고자료\]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과기부2]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2019. 11. 27. 확정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서 ①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② 중간평가시 현장 컨설팅 또는 발표회 등으로 추진, ③ 기존 부처별로 상이했던 최종평가 등급과 기준의 표준화 등이 있음

[\[참고자료\]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기재부1]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관련

2019. 12. 4.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핀테크 관련, 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제(스몰 라이선스) 도입 및 3,000억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투자펀드 조성, ② AI 관련, 1조원 규모 차세대 AI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추진, ③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 ④ 수소경제 관련, 2022년까지 수소차 6.7만대, 충전소 310기, 발전용 연료전지 1GW 보급, 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 육성 및 에너지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등 유망 신산업 육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보도자료\(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참고자료\]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참고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참고자료\]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



[\[참고자료\]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기재부2] 캄보디아,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2019. 11. 25.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2019. 11. 27.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됨. (i) 캄보디아와의 협정을 통해,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되고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에는 캄보디아 현지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됨. (ii) 베트남과의 의정서를 통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기존 15%의 사용료 소득세율은 10%로 인하함(향후 국회 비준 절차 예정)

[\[참고자료\]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시행

2019. 11. 29.부터 벤젠 등 9종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자체에서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②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는 물질은 해당 지역에 별도 적용 등이 있음 (다만, 배출저감계획서상 저감목표 미달성시 제재 없음)

[\[참고자료\]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본격화](#)



[방통위] '지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

2020. 1월부터 지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지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이 시행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행위 금지, ②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담 차별 금지, ③ AS 및 분실 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담 차별행위 금지 등이 있음

[\[참고자료\] 지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 자료](#)



[국토부1] 한-중 복합운송 시범사업 내년 중 실시

2019. 12. 2. 양국 간 물류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내년 중 한국차량으로 산둥성에 위치한 웨이하이 보세구역부터 웨이하이항, 인천항, 인천공항을 거쳐 북미지역까지 차량교체 없이 운송할 수 있게 됨

[\[참고자료\] 김현미장관 한-중 복합운송 시범사업 내년 중 실시](#)



[국토부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9. 12. 3.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완화, ② 국가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범위 조정 등이 있음

[\[참고자료\] 노후 산단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입주기업 간 상생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



[산자부]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2019. 11. 29.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심의위원회는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입 어린이제품의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 확대, ② 사용연령 구분 기준(8세 이하 등) 마련, ③ 위해도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참고자료\]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제2차 어린이제품안전기본계획 수립](#)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Deep Fake)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우리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또는 방송서비스 등이 포함된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음.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규모는 잠재적으로 방송시장 매출(4조 7천억원)과 통신시장 매출(35조 3천억원)을 합치면 약 40조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는 통신비인하 등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 그러나 관련 법령의 부재로 정부는 현재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정확한 가입자 수, 매출액 등 기본적인 통계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방송이 포함된 결합상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없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자 및 매출 점유율, 요금 및 품질의 수준, 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에 대한 세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정확한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되도록 그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법령에서 특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16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열수송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3항, 제23조의2)

3. 주요 국회 입법 및 정책 토론회 일정

개최일시	토론회명	개최의원	장소
12.10. 10:00	스마트건설 시대, 공간정보의 역할과 전망에 관한 국회토론회	송석준(한)	회관 제1소회의실
12.10. 10:00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김종민(민) 대한변협	회관 제1세미나실
12.11. 09:30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물질과 경로를 중심으로	김학용 (한, 환노위원장)	회관 제3세미나실
12.12. 10:00	사무금융권 비정규직 현황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김병욱(민) 이정미(정)	회관 제1세미나실
12.12. 13:30	한-호주 수소협력 세미나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회관 제2세미나실
12.13. 10:00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세미나	송석준(한)	회관 제2세미나실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실용적인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대관 및 PR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A팀은 법적 자문 및 이에 수반된 다양한 정책적 자문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종합적·전략적·실용적으로 처리해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02-316-4630

✉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02-316-4432

✉ sbkim@shinkim.com



홍정아
외국변호사

☎ 02-316-4487

✉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 02-316-1773

✉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 02-316-2573

✉ jeroh@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

판교

베이징

상해

호치민

하노이